

7월1일 특별시의회 첫 임시회 전남도의회서 열린다

당선자 91명 첫 간담회 개최 장소 합의
전자회의·표결시스템·좌석 규모 등 고려
통합특별시 공식 출범 위한 첫 단추 꿰

실무협의 위한 '안건협의체' 10명 구성
의정단 구성 등 운영체계 논의 본격화
24일 이전까지 쟁점 합의안 도출 목표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임시회가 특별시의원 당선자들간 합의로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2·3면 의장 선출과 회기 결정, 조례안 처리 등을 7월1일 오전 8시부터까지 마쳐야 하는 첫 임시회 개최 장소가 결정된 만큼 통합특별시의회의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의회가 통합 필수 조례를 의결해야 같은 날 오전 9시 공표·시행 절차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9일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 의원 사전 간담회를 열었다.

당선 의원 91명은 간담회에서 7월1일 첫 임시회 개최 장소를 전남 무안 소재 전남도의회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당선 의원들은 출범 당일 대규모 안전 처리가 예정된 만큼 회의 운영 여건과 표결 시스템 등을 종합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첫 임시회 개최 장소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당일 원활한



특별시장·교육감·시의원 당선자 한자리에 9일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 의원 간담회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특별시의원 당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향후 의회 주청사나 본회의장 운영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규모는 68㎡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833㎡)보다 작지만, 좌석 수는 107석으로 광주시의회(66석)보다 많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기명 기표·전자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수 안전 처리와 표결 진행에 적합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통합의회 운영 체계와 조직 구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선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운영 기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협의체는 의결기구가 아닌 주요 현안을 조율하는 실무 협의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안건협의체는 광주 강수훈·심철의·안평환·조석호·박필순 당선 의원과 전남 최선국·강문성·진호건·최정훈·김명우 당선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안건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당선 의원들이 협의체 참여 기회를 요구했지만 최종 구성은 민주당 당선 의원들만 채워졌다. 안건협의체는 오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당선자 워크숍 이전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체당선자총회를 열어 최종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출범 첫날 통합조례 제정안 52건과 조례 폐지안 1건, 통합규칙 제정안 18건, 규칙 폐지안 4건 등 총 55건을 의결해야 한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 56건, 시장 제출 조례안 480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97건 등 대규모 자치법규 정비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합시의회 당선 의원 91명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 시·도의회 관계자·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딛

고 있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서로 다른 2개 시·군·구의 삶을 하나의 특별시에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민당선자는 "모든 시정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시민이 결정하면 시장이 따르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한다"며 "특별시 시정을 시민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특별시의 미래와 성공 역시 의회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는 "우리 아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소외돼 무분별한 경쟁 속에 살아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과 특별법을 활용해 대한민국 교육 특별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광주 생활권'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 본궤도

도, 총 2천689세대 규모 실시계획 인가
전남개발공사, 이달 착공 2030년 준공
72만㎡ 친환경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동광주에서 5km 거리에 위치한 담양 보춘지구 주거단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전남개발공사는 9일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지난 5일 전남도의 인가를

받아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담양군 고서면 보춘리 일원 72만4천223㎡ 부지에 2천689세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생활권'인 보춘지구는 호남고속도로,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과 접속이 용이해 광역·지역 간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광주권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2017년 12월 담양군과 투자협

약(MOU)을 체결한 이후 사업 검토를 본격화했다.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 이후 전남도, 담양군과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 왔다. 현재 협의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잔여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성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공원·녹지를 35.2%를 확보하

고 친환경 저밀도 개발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4-REST(자연·소통·행복·여유)'를 핵심 개발 콘셉트로 메타세쿼이아길, 보춘천 순환형 프롬나드, 보춘 테마숲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공간을 조성해 자연과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생태친화도시(Eco-friendly City)를 구현

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광주와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 광역생활권 형성을 선도할 핵심 사업"이라며 "전남·광주 연접지역 대표 상생모델로 조성해 대도시 근교 정주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본사 사령

(6월10일자)

▲최재호 대표이사·사장

OK! **자랑스러운 전남시대**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력, 용수, 부지가 풍부한

첨단반도체 팹

전남이 최적지입니다.